

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안 모색

대구시 교통정책과
2024.7.24.

광주시 자치경찰정책과 생활안전팀
2024.8.13.

대구시,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후 성과 측정

대구시는 도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: PM)의 속도를 하향 조정한 후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.

시는 지난해 PM 대여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·관협의체를 구성하고, 전국 최초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춘 바 있다. 더불어 '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'과 '5대 올바른 이용수칙' 등 PM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고, 구·군 및 경찰청과 상시·합동단속을 병행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였다.

시 발표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(1~6월) 20건(29%) 감소하고, 부상은 23건(28%) 준 것으로 나타났다. 시는 올해도 민·관협력회의를 통해 가상주차구역* 도입과 PM민원관리시스템** 구축 등 추가적인 PM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.

광주시,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 운영

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PM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등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는 운동을 펼친다.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위해 광주권에서 영업 중인 PM 업체 세 곳과 '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업무협약'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
업무협약에 따라 업체 세 곳은 올해 시범적으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해 운영하게 된다. 광주권에서 운행 중인 8,300여 대의 PM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 승차 정원 준수, 음주운전 금지, 주차질서 확립,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교육, 대신민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.

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"2024년 자치경찰 정책수요 여론조사 결과,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PM(37%)을 꼽았다"라며 "민·관·경 협력을 통해 PM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것"이라고 전하였다.



대구시 PM 이용 가이드라인

출처: 대구시, (2024). 개인형 이동장치(PM)
교통법규 위반 운행 엄취! 5월 20일 보도자료.

* 공유 PM 운영사 앱과 GPS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 PM을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

** 시민들이 PM 민원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PM 관리 시스템